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 11. 27.(화) 10:00

시정질문 답변자료



구 미 시

시 정 질 문 요 지

질문 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자	비고
윤종호	1. 기구조직 개편으로 이루어지는 직렬별 공무원 충원 방법은? 2. 행정구역 개편 없는 기구조직 개편으로 구미시가 제시하는 30명 공무원 증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보면 특정 직렬이 국장, 읍·면·동장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전문직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향후 구미시의 직렬별 인사 정책 방향은? 4. 승진이 되었지만 보직이 없는 6급 이상 무보직 대책 방향은? 5. 새마을과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새마을 관련 예산편성과 새마을 관련 운영방향 계획은?	시 장 〃 〃 〃 〃	

질문

1. 기구조직 개편으로 이루어지는 직렬별 공무원
충원 방법은?

□ 4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현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윤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총 1국 8과가 신설되며, 공무원
충원 또한 신규 행정수요에 따라 충원할 계획입니다.
- 공무원의 충원은 행정기능과 업무의 성질, 수행요건과 난이도
및 책임도에 따라 직렬 및 직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또한 복합적 업무성격일 경우 복수직렬 책정으로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이번 기구개편에 따른 공무원
증원 또한 이와같은 방법으로 직급별, 직렬별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 불요불급한 공무원 충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공무원 인재양성에 더욱 힘을 계획합니다. 직렬별 전문적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행정환경변화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자질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의 자리는 시민들의 선택으로 임기가 정해져있습
니다만, 공무원은 조직 내에서 계속해서 시민들을 위해
온 역량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번 조직개편 또한 민선7기 시정운영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구미시의 발전을 염두한 기능조정과
정원 증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2. 행정구역 개편 없는 기구조직 개편으로 구미시가
제시하는 30명 공무원 증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

- 2008년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10년만입니다. 어찌보면
10년간 변화해온 환경에 비해 그동안 조직은 정체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직개편은 단체장의 지역발전에 대한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 철학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공정과정입니다.
- “경기가 안 좋을수록 조직을 빨리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앞설 수 있다”고 보는 기업논리처럼, 조직의 전략적 유연성이 또다른 하나의 도약조건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직개편이 구미 발전의 새로운 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구역 개편은 조직개편과는 다른 의미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여년간 고정되어 온 읍면동의 경계 영역과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선 주민입장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들의 일상적인 작은 생활문제 해결부터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회복이라는 점에서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 또한, 주민 일상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들과 충분한 유대와 공감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 부문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공공분야 증원정책의 지속추진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공무원 증원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 현재, 구미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도내 최고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정책 분야에 증원이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현안 기능은 약화되거나 소외될 수밖에 없는 행정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금 구미는 공단도시에서 더 나아가 시민 정주·생활 양식인 소프트웨어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시민들 생활에서 매일 느끼는 정주여건, 그러면서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도시재생, 문화관광, 교육지원, 대중교통 등 기능들을 전략적,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최소한의 인력증원으로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협업조직을 만들겠습니다.

- 또한, 단순히 인구증감에 따른 정원 조정의 적정성을 논하기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구미시 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고민해야하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인구소멸위험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시군구중 89개가 소멸위험지역이며, 도내 23개 시군의 83%인 19개가 포함되었습니다.
- 오히려 인구정체라는 우려와 달리 구미시는 지방소멸 위험지수 1등급으로 도내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또한, 최근 1년 도내 인구증감 자료에서도 구미는 1,800여명 정도 인구가 증가되었고 도내에서 구미, 경산, 예천만 인구증가가 나타났습니다.
- 구미시의 미래와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 적절한 공무원 증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이제 지방자치도 도시간 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무원 역량이 지방자치의 경쟁력이고, 경쟁력이 상실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 예전의 지방정책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하달하였다면, 지금은 시민들 참여와 의견수렴이 반영된 정책들이, 공모과정 등 지자체간 경쟁을 통해 채택되어야 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지방도시를 키우고 시민을 행복하게 해줄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야 할 시대이고, 먹거리를 직접 찾아나서기 위해 공무원 증원과 역량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앞으로 인력증원에 따른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되, 적절한 인력증원과 적재적소 배치는 물론 인력확충이 조기에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직무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3.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보면 특정 직렬이 국장, 읍·면·동장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전문직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향후 구미시의 직렬별 인사 정책 방향은?

- 공무원의 인사운영은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로 사향으로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 등이 반영된 법과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하겠습니다.
- 공무원 직렬별에 따른 인사정책이 별도로 있는건 아니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분야는 확대하고, 행정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직렬별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인사정책을 포함한 시정운영사항의 기준은 무엇보다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 공무원의 직위에 따른 직무범위 확대와 책임성 증대를 고려한 인사운영으로 단순히 직렬별 공무원 자리 차지를 위한 인사정책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이 시민을 제일 우선 생각하고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조직과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4. 승진이 되었지만 보직이 없는 6급 이상 무보직 대책 방향은?

- 전국 시군의 무보직 비율은 통상 20%대 수준입니다.
- 업무에 따른 보직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2011년 6급 근속승진제도 도입으로 인해 6급 무보직 비율의 증가는 필연적 상황입니다.
- 6급은 공직사회에서 중추적인 업무와 함께 상하관계를 이어주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직급입니다.

- 이러한 점에서 사기진작 차원의 무보직 해소는 물론 필요하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무분별한 보직 확대는 행정효율성 저하는 물론 불필요한 직렬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보직기회 제공차원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보직 부여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 공직사회 내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식변화와 리더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5. 새마을과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새마을 관련 예산편성과 새마을 관련 운영 방향 계획은?

- 당초, 시민공동체 활성화와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부서 명칭으로 ‘시민공동체과’로 부서명칭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 그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부정적 오해 등으로 새마을과 명칭 변경으로 인해 시민사회에 갈등과 논쟁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사항을 검토하고 의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새마을과’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능에 적합한 부서명칭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명칭으로 인한 시정낭비를 하루빨리 종식하고 지역 현안추진과 경제회복 등 새로운 구미 변화를 위해 기능 체계를 정비한 전체적인 조직개편의 실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지역정서를 감안하고, 의회와의 협치 차원에서 결정된 ‘새마을과’ 명칭 유지를 비롯한 조직개편의 실시로 구미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시의회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새마을 관련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향후 새마을의 새로운 역할과, 단체의 자율추진 역량 강화,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확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건설 등에 새마을관련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예산만을 편성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진형 민간단체로서 자립적인 조직체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위상을 정립하여 변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는데 행정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다양한 시민단체의 시정참여 확대, 시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담당하는 부서 기능으로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 구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새롭게 평가하기도 하고, 재해석 하여 새로운 장점을 이끌어 내어 구미의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 시대적 요구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와 시민단체의 자율화, 민간화에 있으며 따라서 국가가 직접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시대에 정부주도로 태동한 새마을 운동은,
- 소위, 관변단체라는 외부의 질서와 오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진형 시민공동체 민간운동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추진할 때 구미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시민단체도 또한 함께 성장해야 할 것이며,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과 연대 협력체계를 폭넓게 구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량을 담당하는데 행정역할을 하겠습니다.

시 정 질 문 요 지

질문 의원	질 문 요 지	답변자	비고
이선우	1. 2019년의 시정의 핵심 방향과 주된 목표 2.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과 유품에 대하여 2-1. 선산출장소에 보관 중인 박정희 대통령 유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2-2. 박정희 유품 전시 계획 및 방향과 전시관 전체의 운영 계획 2-3. 1급 공립 박물관으로 인가를 받은 가칭 박정희 역사 자료관의 명칭 확정 여부 3.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운영에 대하여 3-1.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운영 관련 시장님께서 취임 전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계셨는지? 3-2. 도에서 운영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과 운영비와 시설 관리비에 대한 분담 계획 4. 구미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 4-1. 2019년 계획에 있는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목적과 설립 이후의 목표 4-2. 실패한 사례가 더 많은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이유 4-3. 문화의 상업화의 확대로 인한 지역 문화의 양극화에 대한 방안	시 장 〃 〃 〃	

-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 시정의 핵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민선 7기가 출범하는 사실상의 원년으로 「새로운 구미, 미래 100년」의 기틀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100대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구미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공단 분양 활성화, 8대 신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화폐 발행 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도시공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과 시내 버스 노선체계 개편, 신교통수단 도입 등 교통체계를 혁신하고, 시민들이 문화를 만들고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노동회관, 노동자 쉼터 설치 등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는 보편적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한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끝으로, 시정 전반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의회와 협치를 강화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질문

2.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과 유품에 대하여

2-1. 선산출장소에 보관 중인 박정희대통령 유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 선산출장소에 보관 중인 박정희대통령 자료는 총 5,670점으로, 청와대에서 직접 사용한 가구류 및 생활용품, 사무용품과 해외 순방과 외교관련 기념품 등이 있습니다.
- 특히 고속도로 및 철도 개통, 포항제철과 같은 최첨단 공장 준공 등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물품도 있습니다.

질문

2.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과 유품에 대하여

2-2. 박정희 유품 전시 계획 및 방향과 전시관 전체의 운영 계획

- 역사자료관의 1차적인 건립 목적은 선산출장소에 보관 중인 5,670점의 박정희대통령 자료의 체계적·효율적인 보존·관리·전시입니다.
- 또한 역사자료관은 한 개인의 공(功)과 치적을 나열하는 기념관이 아니라, 1969년부터 조성된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 초기 생산제품, 근로자들의 주경야독, 품질관리 활동 등 근현대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역사적·학술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전시·교육하는 역사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현재 전시콘텐츠 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전시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전시주제, 전시자료 선정 및 설명내용 등 전시콘텐츠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역사자료관 운영은 2015년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문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 현재 문화관광담당관 소속의 박대통령기념사업계 직원(현원 6명)이 역사자료관 소속으로 편입되어 역사자료관, 민족중흥관, 생가주변 공원 일대를 관리·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박물관 운영을 위한 당직·시설관리·학예연구·교육 분야의 인원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 연간 운영비는 12억원(추가 인건비 6, 시설관리 3, 사업비 3)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박물관 등록 및 한국박물관협회 가입을 통해 전시 및 교육사업 보조금을 확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과 유품에 대하여 2-3. 1급 공립 박물관으로 인가를 받은 가칭 박정희 역사자료관의 명칭 확정 여부
----	--

-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은 우리시에서 '1종 전문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14년 3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며 당초 건의사업의 명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5년 4월 문체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총사업비는 195억원(국 77, 도 15, 시 103)이며, 올해까지 국비 50억원, 도비 9억 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현재 전시실·수장고·세미나실 등 향후 박물관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설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 11월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 본 사업은 당초 2019년 10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시비 확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202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명칭은 전시콘텐츠 내용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사안이므로, 전시콘텐츠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2020년 상반기 예정)에 전시콘텐츠와의 부합성, 시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 확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국고보조금 지급 조건」에 의거, 사전에 경상북도 지사를 경유하여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질문

3.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운영에 대하여

3-1.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운영 관련 시장님께서 취임 전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계셨는지?

- 인수위원회에서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전후 사정을 살펴보니, 경상북도의 사업이라는 데에 공감을 했고 이설이 없습니다.
- 다만, 법적으로는 도시공원법상에 관리주체가 구미시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보니,
- 경북도는 현행 법을 근거로 구미시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 구미시는 현행법이 실재하더라도 경상북도지사가 국고 보조사업 대상자이고 사업을 주도했으니,
- 경상북도에서 맡아야 한다고 전임 시장 때부터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 논쟁의 이면에는 연간 수십억원이 들어가야 하는 운영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현실적 문제입니다.

질문

3.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운영에 대하여

3-2. 도에서 운영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과
운영비와 시설관리비에 대한 분담 계획

- 경북도에 운영하더라도 당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도시공원법입니다.
- 현행법상 도시공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경북도 운영에 모순이 생기므로, 도시계획변경(도시공원→문화시설)을 추진하자는 것이고,
- 도시계획변경에 최대 2년은 소요되므로 그때까지는 경북도와 구미시가 반반 부담해서 운영하자고 합의했습니다.
- 그리고 기타 실무적인 협의는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협의에 있어서 구미시의 입장은 구미시 예산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북도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4. 구미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

4-1. 2019년 계획에 있는 구미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목적과 설립 이후의 목표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되는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한 시책과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출연기관입니다.
-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으며, 인구 43만에 평균연령 37세의 재정자립도 도내 1위인 우리시도 도시 규모에 걸맞는 문화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이렇게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민선 7기 시장 공약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제시하였습니다.
-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산업과 경제에 가려져 있던 우리시가 가진 문화예술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체계화하는 문화예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가 가진 문화적 특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발굴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단의 설립은 가깝게는 2020년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 우리시의 문화적 역량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만족스러운 삶’, ‘수준 높은 삶’을 구현하는 문화행정 실현으로 도시의 정주가치를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질문

4. 구미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

4-2. 실패한 사례가 더 많은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이유

- 2017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전국 6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예술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문화재단의 독립성, 전문성, 역할의 명확성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존재합니다.

○ 특히 과거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은 문화시설 및 지역축제 운영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사례들이 존재하기에, 문화재단 고유의 정책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단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 부천, 안양, 성남 등은 문화재단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재단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거나, 다양한 연구 활동과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역 내 문화예술 정책수립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구미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을 체육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문화체전으로 승화시켜 구미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전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르면,

- 지역경제 발전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업으로 기업성이 있는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 주민 복리에 관한 사업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출연기관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화예술 관련 업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업으로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익 발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수입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따라 많은 문화재단이 기금 조성이나 후원금 모집 등의 별도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문제점이 존재하나 꾸준히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에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아울러 문화재단의 운영비는 재단의 규모나 업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설립타당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 필요예산 등이 최종 도출될 예정이나,

- 시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으로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시군의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벤치마킹하여 구미 시민에게 많은 문화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4. 구미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 4-3. 문화의 상업화의 확대로 인한 지역 문화의 양극화에 대한 방안
----	--

-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변화하고 문화예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예술 정책도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관 주도형이 아닌 지역 및 문화예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시책 및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문화진흥법」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지역문화진흥법」의 핵심 가치는 ‘문화 분권’,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에서 문화재단 설립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문화재단 설립은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것으로, 지역 문화를 중요시여기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문화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재단의 역할은
 -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 －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 －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지역에서 설립하는 문화재단은 지역 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문화예술의 시장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적지원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물론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대부분의 경영평가에서는 수익률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 하지만 문화재단의 경영평가에 수익률 항목을 삭제하는 등 문화재단이 수익률에 매몰되지 않고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대구문화재단)
- 지역의 문화재단은 행정과 시민, 예술을 연결하는 매개자이자 지역 문화예술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는 구심점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문화재단이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 복지를 향상시키고 문화가 있는 도시, 정주가치 높은 도시를 만드는 전문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